

야 “중복·공안몰이 중단”...여 “특검 수용 불가”

‘예산국회’ 파행 조짐

김한길 “중복몰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상처 덧나게 해”

새누리, 최고위 이어 중진들도 특검 반대...오늘 의총서 결론

야당은 27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로 촉발된 여론의 ‘중복·공안몰이’에 맞서 한목소리로 반격을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논의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 원회의에서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여론의 ‘중복몰이’ 비판과 정국정상화 제안에 발언을 집중할 정도로 비중을 뒀다.

김 대표는 “중복몰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상처를 덧나게 한다”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복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중복(從北)보다 ‘중박(從朴·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문제라고 거듭 주장

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당·정·청이 하나가 돼 대통령을 여왕 모시듯 하며 반대연설 목살과 매도에 급급하다”면서 “틀린 나면 악의적 중복몰이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면서 중복몰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인사인 홍영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중복몰이한 것 외에 한 일이 없다”며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박 신부에 대한 공공연한 검찰 수사 지시이자 국민에 대한 침묵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박 신부를 고발한) 보수 단체들을 무고죄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까지 여부를 판단해 보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따른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논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특검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들과 당내 원로·중진들이 사실상 모두 특검 논의에 반대함에 따라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기류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기관 대선개입 싸고 여야 대치...‘준예산’ 우려

내년도 정부의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지속하면서 ‘예산 국회’까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다음달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27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겠다는 뜻이다.

◇헌법규정 111년째 ‘무시’=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3년 이후로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연말까지 대치하다 12월30일(2003년·2005년) 또는 12월31일(2004년·2010년·2011년)에 가스가 되어 예산안을 처리하곤 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도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11년째 국회 스스로 헌법 준수를 무시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 대치’ 준예산으로 불통 튀

나=헌법상 시한 준수는 물론건너갔다 고 하더라도 최소한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통상 각 삼임위 예비심사부터 예정 위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일정상으로 아직은 준예산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 정국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국회’의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예산과 민생·경제살리기가 직결되는 만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준예산’이란=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헌정 사상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규정이거나 참고할 전례는 없지만, 가급적 최소한 비용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준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안 357조7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액, 공무원 인건비, 시설유지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한 140조8000억원 가량은 지출이 어려워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물러나라”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시국미사 규탄을” 27일 서울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반국가·중복 정의구현사제단 망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시국회의, 사제단 탄압 중단 촉구

“박대통령 강경대응 국민저항 불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광주 시국회의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대통령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반대 세력을 중복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며 “중복과 보수단체를

부추겨 21세기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또 “청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시국미사를 중복으로만 답하는 박근혜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백색테러 조장·중복공세 배후조종 중단, 국정원선거개입 특검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개신교 평신도 단체인 ‘정의평화기독인연대’의 시국기도회와 개신교 목사 모임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정권퇴진 금식기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시국선언 등에 모든 종교인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독교공대위 “국가기관 개입은 부정선거” 보수 기독교단체 “박 신부 발언 중북적 행위”

30여개 개신교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8대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독교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은폐, 두둔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했다”고 말했다. 또 “오리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을 중복 좌파로 규정하며 적절의 대상

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작태는 30년 전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공대위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건강교회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자주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등 보수 쪽의 3개 기독교 단체도 이날 종로5가 연동교회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시국미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일부 사제들의 시국미사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반 국가적, 중북적 행위이자 망언”이라고 했다.

/연필뉴스

새누리 정의화 의원 광주서 ‘남북의료협력’ 특강

새누리당 정의화(부산 중·동구·사천) 의원은 29일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남북의료협력과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특강에서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인 홍경표 의회 박사가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제목으로 초청강연도 이뤄지며, 탈북자 출신 가수 차영주씨의 북한 의료실태에 대한 증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의 의원은 특강에서 “남북의료 협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기차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재가동되게 하면 북한의 경제

회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의료협력재단은 북한에 대한 의료협력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6월 8일 설립됐다. 재단은 북한의 30개 지역을 선정, 30병상 규모의 중차병원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현대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통일 후에는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정상 매매

14평 OP, 1세대

- 16층, 주거겸 사무실
- 전망좋음, 무등산 쪽
- 시세, 5000만원 정도
- 급매, 3300만원

29평 OP, 2세대

- 10층, 12층, 주거겸 사무실
- 로얄층, 하천쪽
- 시세, 1억원 정도
- 급매, 6500만원

53평 사무실, 1세대

- 9층, 사무실 전용
- 전망좋음, 코너(창가)
- 시세, 2억원 정도
- 급매, 1억3500만원

77평 사무실, 1세대

- 20층, 사무실 전용
- 최상층, 전체 올수리
- 시세, 4억원 정도
- 급매, 2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1층 상가, 25평

- 오피스텔 정문 코너
- 현재, CU편의점 임대중(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 법인체로 양도 양수 할 경우 이전비 없음
- 시세, 2억5천만원 정도
- 급매, 1억7500만원

주인이 직접 매매 합니다.

H. 010-3605-5000